

칼럼

장기채 주필



젊은 층 부양 부담 급증하는 나라

1960년대 일본이 인구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다마 신도시'는 수도 도쿄 남서쪽에 위치한 이 도시는 한때 인구 31만을 목표로 개발돼 계획도시지만 지금은 '노인들의 도시'가 돼버렸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젊은 인구의 도시 유출 때문이다.

초·중학교가 잇따라 폐교되고 집값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다마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다마시 인구는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14만7734명 수준이다.

이 중 24.7%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초고령 도시다.

카네코 류이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소장은 "아키타현, 시마네현 등의 초고령 도시에서 낮시간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노인밖에 없다"며 "고령화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극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일본의 근저를 흔들고 있다는 말이다. 급증한 노년층 인구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력 저하, 노인부양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문제에 대응할 수 있었던 기회

의 시간'을 놓친 일본은 뒤늦게나마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국력을 쏟았다.

이는 출산·고령화가 꺾힐 것이다.

일본인구문제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1995년을 최고점으로 이미 20년 가까이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1995년 정점대비 1000만 명 이상 줄었다.

젊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각종 아르바이트 업종들이 채용난을 겪고 있지만 임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직원들의 이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 돌봄 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요양관련 종사자수는 2010년 말 약 133만 명으로 10년 사이 2.4배가 늘었지만 여전히 수요 대비 크게 모자라는 형편이었다. 노인의 고독사와 각종 노인 범죄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금 일본 내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인구절벽에 대한 경종이 울렸음에도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과 맞물려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여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며 노인자살률도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아 노후 삶의 질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젊은 층의 부양 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전략 하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채택되고 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은퇴하

며,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활동적 고령화'가 핵심 기조라고 한다.

따라서 100세 시대의 도래를 대비하여 우리사회는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공동적 대응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젊은이는 노년기를 '어셈'으로 생각하며 소극적인 인식을 버리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려는 도전과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사회, 개인의 보다 다각적인 대응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그래야 길어진 노년이 젊은이는 물론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 노인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의 범주를 넘어 국가적인 책무가 되었다.

토인비가 부러워 했던 우리의 정신문화도 되살려야 한다.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라는 현실이 몹시 부끄럽다. 게다가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더더욱 부끄럽다.

이제 노인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의 범주를 넘어 국가적인 책무가 되었다. 토인비가 부러워 했던 우리의 정신문화를 되살려야 한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에서 노인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길어진 노년이 젊은이는 물론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社說

낙시어선 출항 준칙 엄수해야

앞으로 태풍·중랑 등 주의보나 경보뿐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돼 낙시어선은 출항할 수 없게 된다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낙시어선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이번 개정령안은 낙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낙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고자 기상법에 따른 태풍·중랑·강풍 주의보나 경보뿐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초당 풍속 12m 이상, 파고 2m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낙시어선 출항이 제한된다.

또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낙시어선 운항을 제한하되, 항해용 레이다 등 안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낙시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안전장비 기준도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만들어진 배에는 승객이 이용하는 모든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하도록 했고,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이 낙시어선에는 반드시 선박자동식별장치·구명팩·조난위치지동발신장치를 장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낙시어선업 신고 대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등 관리선은 제외했다. 다만, 기존 낙시어선으로 신고된 관리선은 5년간 유예를 받는다.

출항 준칙을 준수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비특보에도 무리하게 출항을 감행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수부는 개정 사항이 현장에서 빨리 뿌려내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忠 則 盡 命

忠 則 盡 命

▷ 뜻: 충성(忠誠)함에는 곧 목숨을 다하니 임금을 섬기는 데 몸을 사양(辭讓)해서는 안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해야

절기상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와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의 시기.

보통 해빙기인 2~3월은 큰 일교차 때문에 땅속에 스며든 물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절개지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

국민안전처 보도자료를 보면 (2007년~2018년) 해빙기 낙석·붕괴 등의 안전사고는 절개지

(54%), 축대·옹벽(21%), 건설공사장(19%) 순으로 발생했고 사상자는 건설공사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해빙기는 겨울동안 못한 골조 공사를 무리하게 시행하는 시기로 자연적 요인과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 사고가 증가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2월에는 판교신도시 내 터파기 공사현장이 붕괴돼 사망자 3명과 부상자 7명

이 발생한 바 있다.

붕괴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생기면 가장 먼저 119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 붕괴가 일어날 수 있으니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구조물이나 잔해에 깔린 사람이 있으면 심각한 외상과 척추·경추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 무리한 이동은 피해야 한다.

사고 후 신속한 119 신고로 피해를 줄이고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공사장 주변의 지반 침하를 확인하고 옹벽이나 축대 균열은 붕괴 위험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토사면 위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자재 등을 쌓아두면 안 되고 토사면 계측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해빙기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은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추운겨울 날씨가 풀려도 우리의 안전의식은 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희창 / 화순 동북안전센터 소방교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편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편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